

지속가능성 공시의 2028년 시작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로드맵과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을 분리해 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8일 로드맵과 9월 1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본시장법을 대조해 발표·입법·시행 단계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11	연번	2026_96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11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2028년 공시를 확정된 의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발표된 것은 대상·일정·유예 방향을 담은 정책 로드맵이고, 실제 의무와 제재는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 하위 규정 확정 뒤에 생깁니다. 기업은 준비를 시작하되 투자자는 첫째 공시가 법정 공시인지 자율 공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금융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1일 현재 공시의 법적 근거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의 공포·시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산 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적용	2027 회계연도·2028년 공시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둘째 단계	2028 회계연도·2029년 공시	연결자산 5조원 이상 코스피
검토 단계	2029 회계연도·2030년 공시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첫 대상	약 291개사	자회사 포함 추산
단계 확대	약 3,171개사	자회사 포함 추산
입법 상태	개정 법률 공포·시행 미확인	2026년 9월 11일

로드맵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첫 대상으로 잡고, 5조원 이상으로 한 단계 넓힙니다. 2조원 이상 확대는 앞선 시행 결과를 평가한 뒤 확정하는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는 법정 공시로 편입하고 최초 3년 동안 제재를 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의 심사·의결과 하위규정 확정 전에는 공시서식, 외부검증과 제재 면제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 사실로 쓸 수 없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정책 로드맵은 정부가 추진할 일정과 방향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상장회사의 법정 공시의무와 위반 제재는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이 정합니다.

적용 기준은 개별회사가 아니라 연결자산입니다. 모회사가 기준을 넘으면 공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비상장 자회사에서 받아야 하므로 준비 범위가 상장사 수보다 넓어집니다.

2조원 이상 단계는 자동 시행 일정이 아닙니다. 2028년과 2029년 공시 결과, 기업 준비도와 국제 동향을 평가한 뒤 확정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첫 단계 직접 대상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입니다. 정부 추산 약 291개사에는 공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해야 할 자회사까지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까지 넓히면 관련 회사는 약 3,171개사로 추산됩니다. 이는 법정 공시회사 수와 같지 않으며 자회사를 포함한 준비 대상 규모입니다.

첫 공시	2028년	2027 회계연도 정보
둘째 공시	2029년	2028 회계연도 정보
2조원 단계	조건부 검토	앞선 시행 평가 뒤 확정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법률의 공포·시행일이 남아 있습니다	로드맵 발표만으로 법정 공시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02 · 최종 공시기준과 서식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기준을 어디까지 반영하고 어떤 지표를 의무화할지 하위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3 · 3년 제재 면제의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면제 대상 위반과 고의·중과실 예외, 민사책임의 관계가 최종 법률과 규정에 적혀야 합니다.
04 · 2조원 이상 확대는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2030년 공시는 앞 단계 평가 뒤 결정하는 조건부 계획입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기업 공시를 볼 때 법정 공시인지 자율 보고서인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2028년이라는 연도와 2027 회계연도라는 정보 기준을 구분합니다. - 재무제표 연결범위와 지속가능성 공시 범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연결 자회사별 온실가스·인력·공급망 자료의 책임자와 결산 일정을 정합니다. - 최종 법률 전에는 로드맵 기준과 회사의 선제 적용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당국	- 법률안·공시기준·시행일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갱신합니다. - 제재 면제의 대상과 예외, 외부검증 로드맵을 최종 문안에 명시합니다.

칼럼길

자본시장법 개정이 2027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행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로드맵은 나왔지만 법률 공포와 하위규정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기한 안에 입법 첫 대상 회사는 2027년 1월부터 법정 공시에 맞춰 자료를 쌓을 수 있습니다.	B 입법 지연 2028년 첫 공시의 법적 성격과 비교 가능성이 불확실해집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국회 의안정보, 법률 공포문과 금융위원회의 최종 공시기준·시행규정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공시 읽는 법 사업보고서 ↗

제도와 규칙 자본시장 공시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3건

01	1차 · 적용 일정·자산 기준·대상 추산·법정 공시 전환과 초기 제재 면제 방향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2026.9.8 · 확인 2026-09-11 원문 열기 ↗
02	1차 ·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확인 2026-09-11 원문 열기 ↗
03	파생 · 첫 공시연도와 회계연도 구분 계산: 2027 회계연도 + 보고시차 = 2028년 공시 · 확인 2026-09-11

추적 예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공포와 하위규정의 공시기준·시행일·제재 면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로드맵의 일정과 현행 법률의 상태를 분리해 적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정책자료와 현행 법령을 분석한 것이며 정부·기업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